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토론회 I

- 실종된 일자리, 파탄난 서민경제 -

일시: 2010. 2. 3(수) 14:00

장소: 국회 본청 245호실



민주당 정책위원회
DEMOCRATIC PARTY

식 순

사회: 이성남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 개 회 (14:00~14:20)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인사말씀 :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격려사 : 정세균 민주당 대표

○ 기조발제 (14:20~14:40)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 빛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 '고용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 김병권 부원장(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토 론 (14:40~15:25) : 각 15분 이내

- MB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김유선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 가계부채 급증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 이명박 정부의 부자 교육정책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김용일 교수(한국해양대 국제대학)

○ 질의응답 (15:25~15:55)

○ 폐회 (16:00)

목 차



□ 발 제

-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 빛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 '고용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 토 론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5

MB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37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 가계부채 급증

- 김용일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교수 45

이명박 정부의 부자교육 정책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발제문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 빛으로 성장하는 경제에서 '고용으로 성장하는 경제'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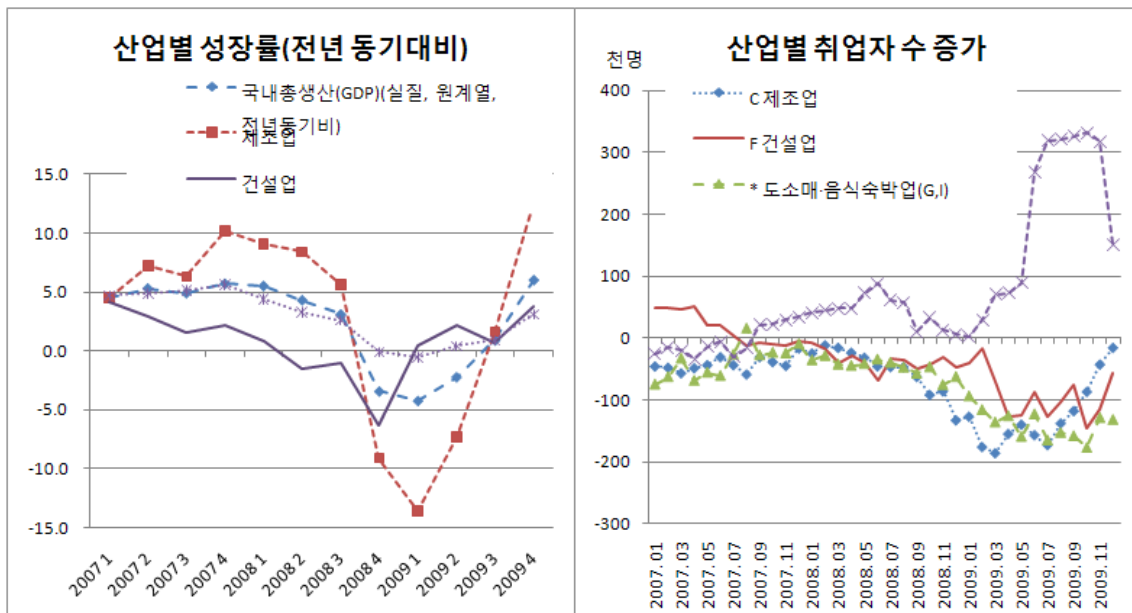
김 병 권 (bkkim21kr@naver.com)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1. 이명박 정부 2년, 토목 건설을 통한 성장주의 실패
2. 부채 경제의 문제점 심화 -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
3.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화와 국가적 고용전략의 향방
4. <부채에 의한 성장>에서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 고용 개혁 과제
 - 금융 개혁 과제
 - 사회안전망 개혁 과제

1. 이명박 정부 2년, 토목 건설을 통한 성장주의 실패

- 2009년 경기 추락을 막고 인위적으로 회복세로 돌려세운 것은 정부의 금리 인하와 구제 금융 그리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등이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대비 17퍼센트 이상 늘어난 301조 원의 재정과 기금을 동원하여 경기지표를 반전시켜냈고, 경제성장률을 1.5퍼센트 이상 끌어 올림으로써 역성장을 피해갔다.¹⁾
- 특히 한국정부는 단기적으로 외형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설, 소비, 고용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단기실적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여기에 실속 없는 포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도실용 - 친서민’ 정책을 적절히 병행하는 민첩성을 보였다. 나아가 국내적 실적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유치와 같은 글로벌 행보를 통해 한국경제의 위상 제고라는 실적을 쌓음으로써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50퍼센트라는 정치적 실적까지 달성하게 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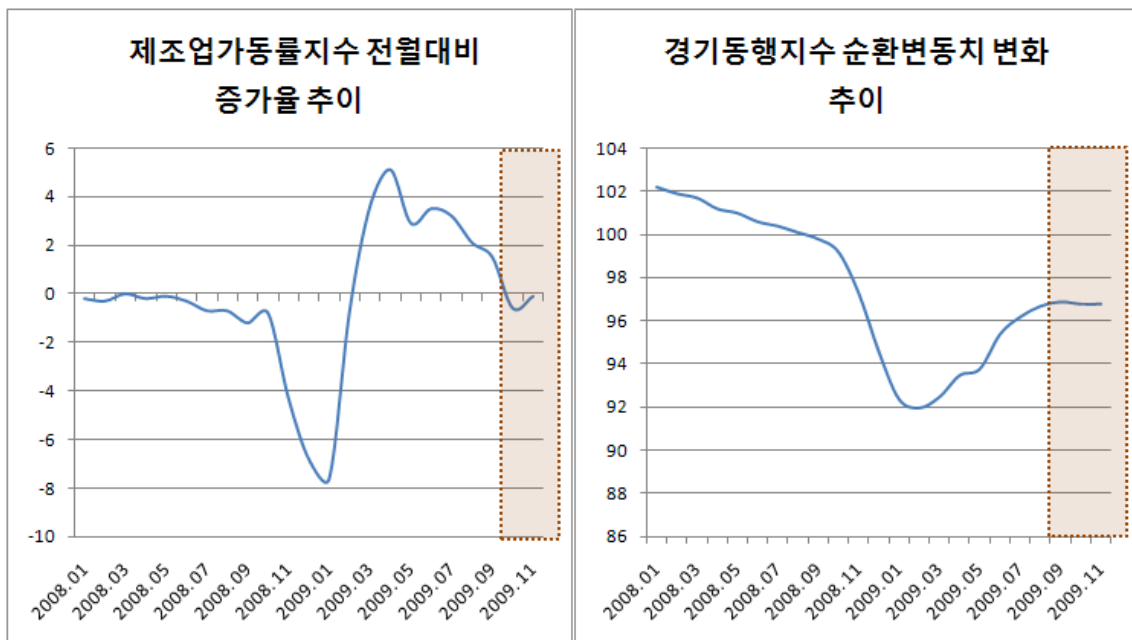


1) 삼성경제 연구소, “2009년 한국경제 회고”, 2009.12.23

2) 2009년 12월 28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53.1퍼센트, 27일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는 49.6퍼센트, 2010년 1월 1일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51.6퍼센트였다. 한겨레가 2010년 1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경제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53.8퍼센트로 나타났다.



-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09년 시행한 경제회복 정책들은 구조적 차원의 성장기반 확충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단기 실적주의에 근거한 것이어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본원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가 발을 빼는 순간 실적은 곧바로 멈추게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자체 선거가 있는 2010년 6월까지 2009년 식의 경기 부양 기조를 최대한 연장하려 하고 있다. 2009년 연말에 292.8조 원의 예산을 강행처리하고 2010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퍼센트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발표한 것만 봐도 이는 분명하다.**
- 이와 같은 경제운용 기조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정부가 2010년 상반기에도 2009년처럼 단기실적 위주로 경제 운용을 하더라도 2009년 하반기와 같은 성장 탄력을 유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2009년 2분기부터 V자 회복곡선을 보이며 빠르게 반전하던 경기 회복기조는 4분기에 접어들면서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예고하고 있다.



- 제조업의 가동률은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08년 11월 68.4퍼센트까지 떨어졌다가 2009년 9월 80.2퍼센트까지 급반전했지만 4분기 들어서는 77.3퍼센트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재고조정 효과가 마무리 되면서

더 이상의 상승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기의 현재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 동행지수 역시 2009년 9월에 고점에 올라왔다가 4분기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³⁾ 2009년 4분기 이후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린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상반기는 작년의 심각한 마이너스 침체에 대한 기저 효과가 일정정도 반영되어 전년 대비 상승폭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2009년 하반기와 같은 V자 형 회복 추세가 이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두 번째 문제는, **단기실적을 겨냥해 집행한 경기부양책이 2010년 상반기까지 실적행진을 이어간다고 해도,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기조의 부재로 인한 후과가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 본래 이명박 정부의 경제노선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규제 완화, 감세, 민영화, 금융화, 작은 정부 큰 시장)에 70년대식 개발주의, ‘747 공약’으로 대표되는 성장주의를 조합한 것이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액면 그대로 추진하기도 어려워졌고 경제 추락을 막고자 도입한 ‘응급조치용 국가자본주의’는 일각에서 ‘신 관치경제’라는 우려를 낳을 정도가 되었다. 여기에 그 실체가 불분명한 ‘녹색 성장’까지 들고 나와 4대강 사업까지도 녹색성장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 결과, 2010년 현재 시점에서는 MB노믹스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종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규제 완화나 감세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개발주의 정책은 녹색산업으로 바뀌었다.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자본주의적 정책도 도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선진화로 이름을 바꾼 민영화 정책은 주로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기획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일관성을 상실한 MB노믹스는 정부로 하여금 집권 후반기의 성장 동력 확충과 경제구조 개편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단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불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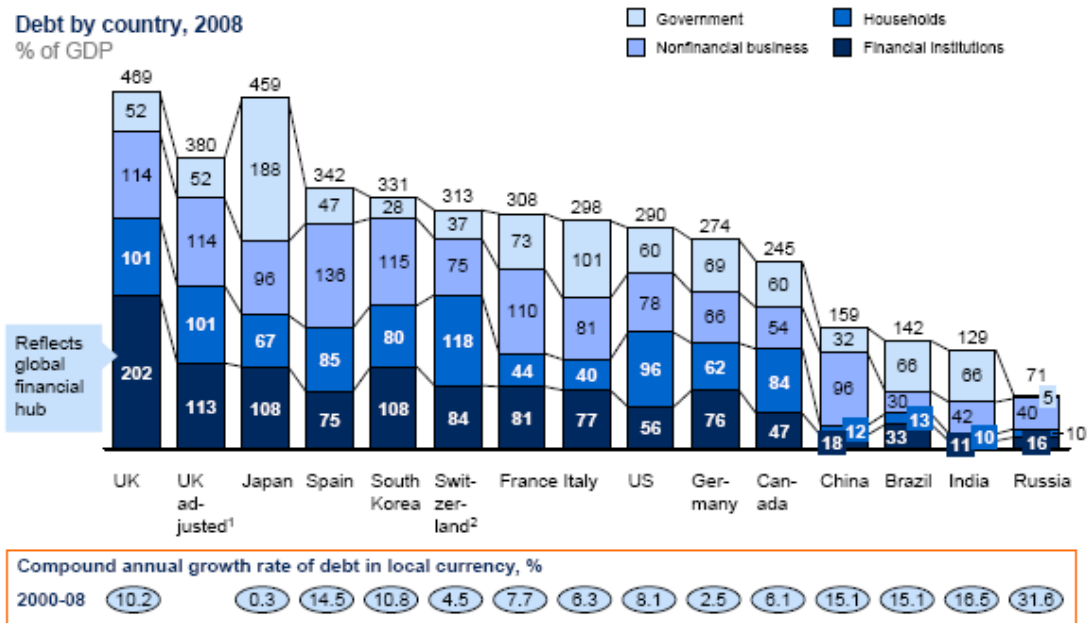
3)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각 월 보도자료 및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www.kosis.kr)



2. 부채 경제의 문제점 심화 -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

- 2009년 경기 회복 과정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실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부채와 부실을 한편에서는 정부가 떠안은 것에 불과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를 감수한 대가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가계로 넘겨진 부실 위험이 2010년 경제의 최대 위기 요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의 재정문제와 고용을 포함한 가계의 부실을 향후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요 국가에서의 각 영역별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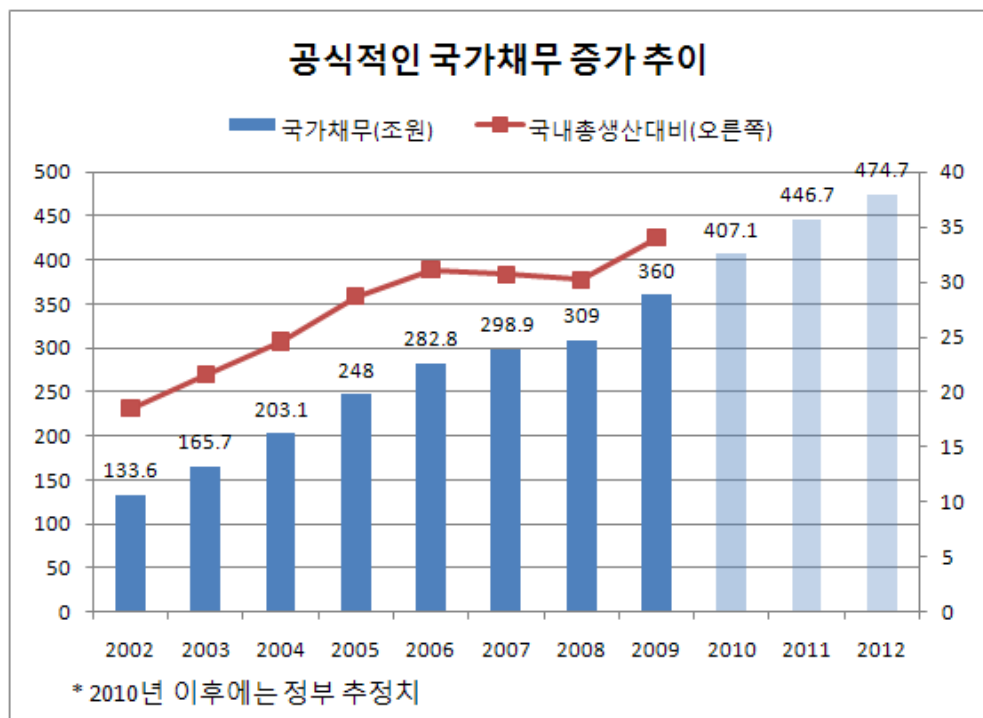
- 최근 경제위기 탈출과정의 특징은,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금융 부문과 기업 부문 부채가 국가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로 이전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10년 초 통화신용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요인> <외국 자본 유출입> <가계 부문 채무상황>을 우리나라의 올해 세

가지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만 봐도 명확하다.⁴⁾ 결국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 위험성이 점진적으로 누적되면서, 동시에 가계 부문의 부채 부담이 주요한 경제적 위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 특히 한국경제는 대규모 토목건설로 국가 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키우고 있는 형편이고,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가계 부채마저 키우고 있어 그 어떤 다른 국가들 보다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가채무]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국내 총생산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증가 속도로 보면 주요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절대 규모도 커지고 있어 2010년 최초로 4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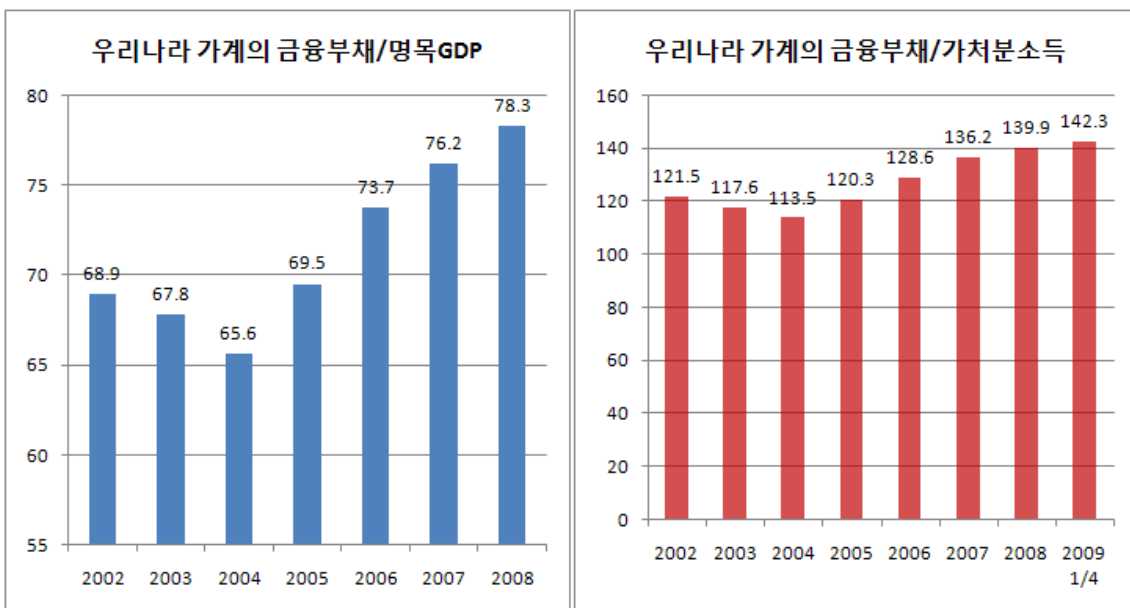


4) 한국은행,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0.1.7



- 특히 2009년 기준 국가채무로 측정된 360조원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시된 297개 공공기관의 부채 377조원을 더하면 가볍게 7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공식적인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은 수자원 공사에, 세종시는 토지 주택공사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공공기관 부채를 함께 고려할 현실적 필요가 커지고 있다.
- 국가부채가 2010년에 당장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이후 위험요인을 키우게 될 것이고, 향후 더블 딥과 같은 또 다른 경제 충격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응력을 극히 떨어뜨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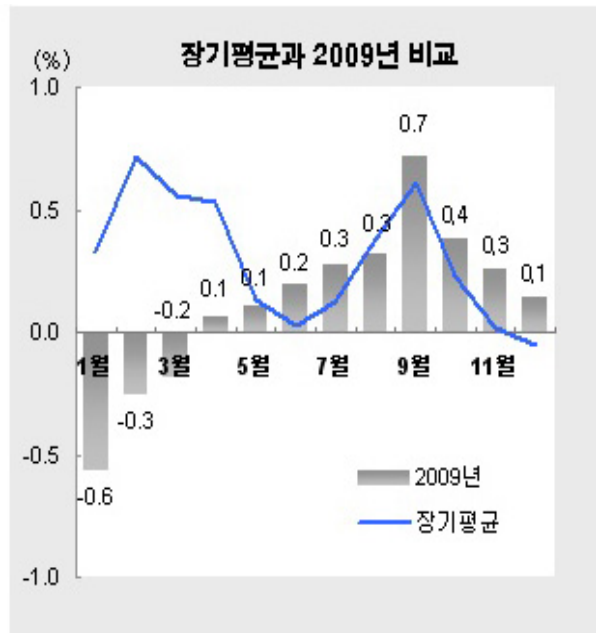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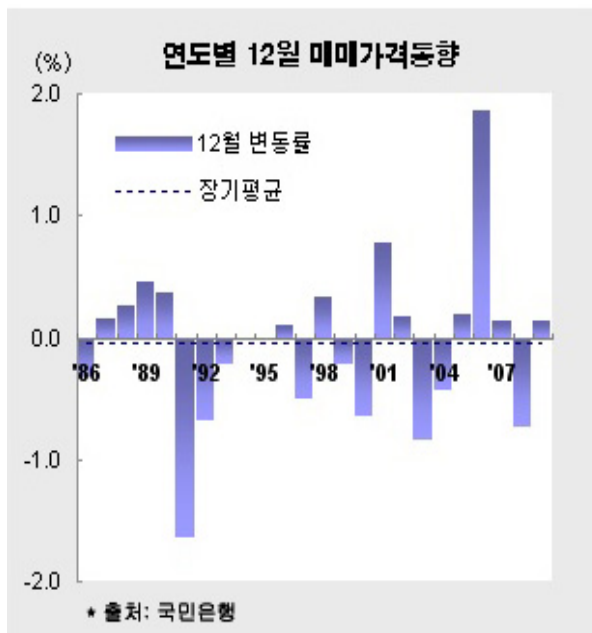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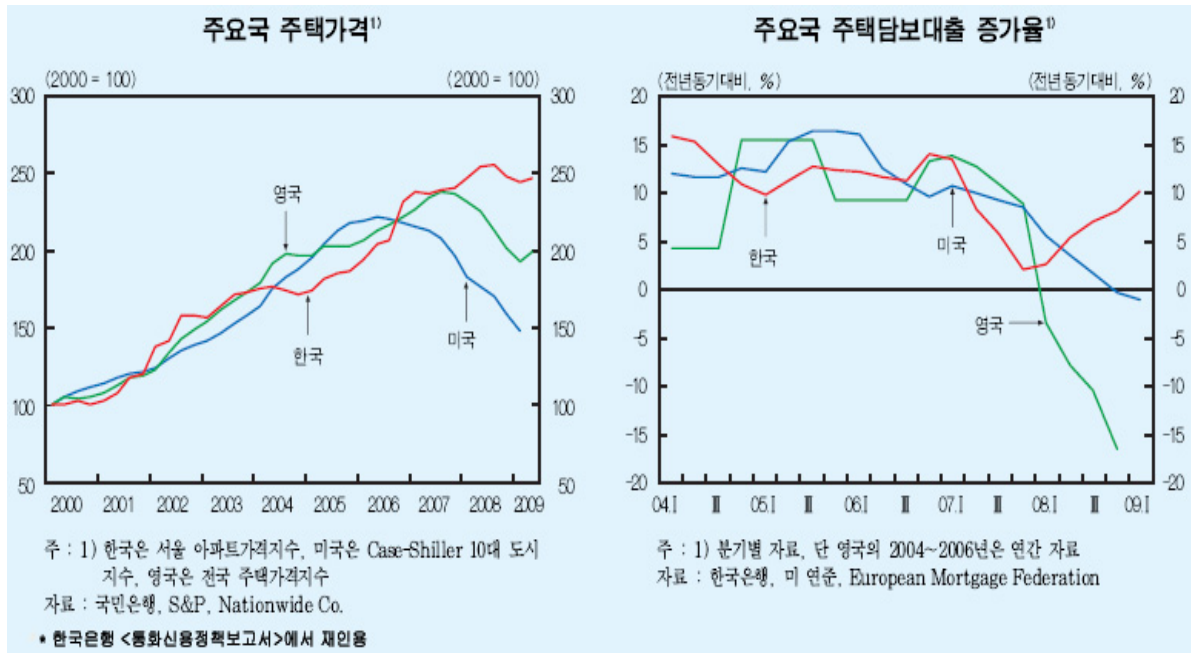
[가계 부채]



- 국가 부채는 위기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은 반면,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 부채는 소비 능력을 저하시켜 경기회복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국경제에서 2010년 부채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이슈는 2009년 3분기까지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기고 있는 가계 부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로는 약 80%,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약 14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당장 가계 자산 대비 가계 부채의 상환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 금액이 2010년에 특별히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계의 소득이 증가추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고, 가계 자산 구성도 매우 불안정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 않다.
- 가계 부채를 각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소득 대비 상환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은 줄어 들고 있지만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자비용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특히 2010년에도 소득이 증가하거나 고용이 안정된다는 징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2010년에 물가상승률을 3%로 잡는다면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비용 상승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현재 시장에서는 2010년 기준 금리가 1.0~1.5% 정도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가계대출이 1사분기에는 6조 원, 2사분기에는 6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기준 12조원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추정에 의하더라도 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가 1퍼센트 올라가면 매월 현재의 가계 이자 부담이 1조 6000억 원에서 20퍼센트가 늘어난 2조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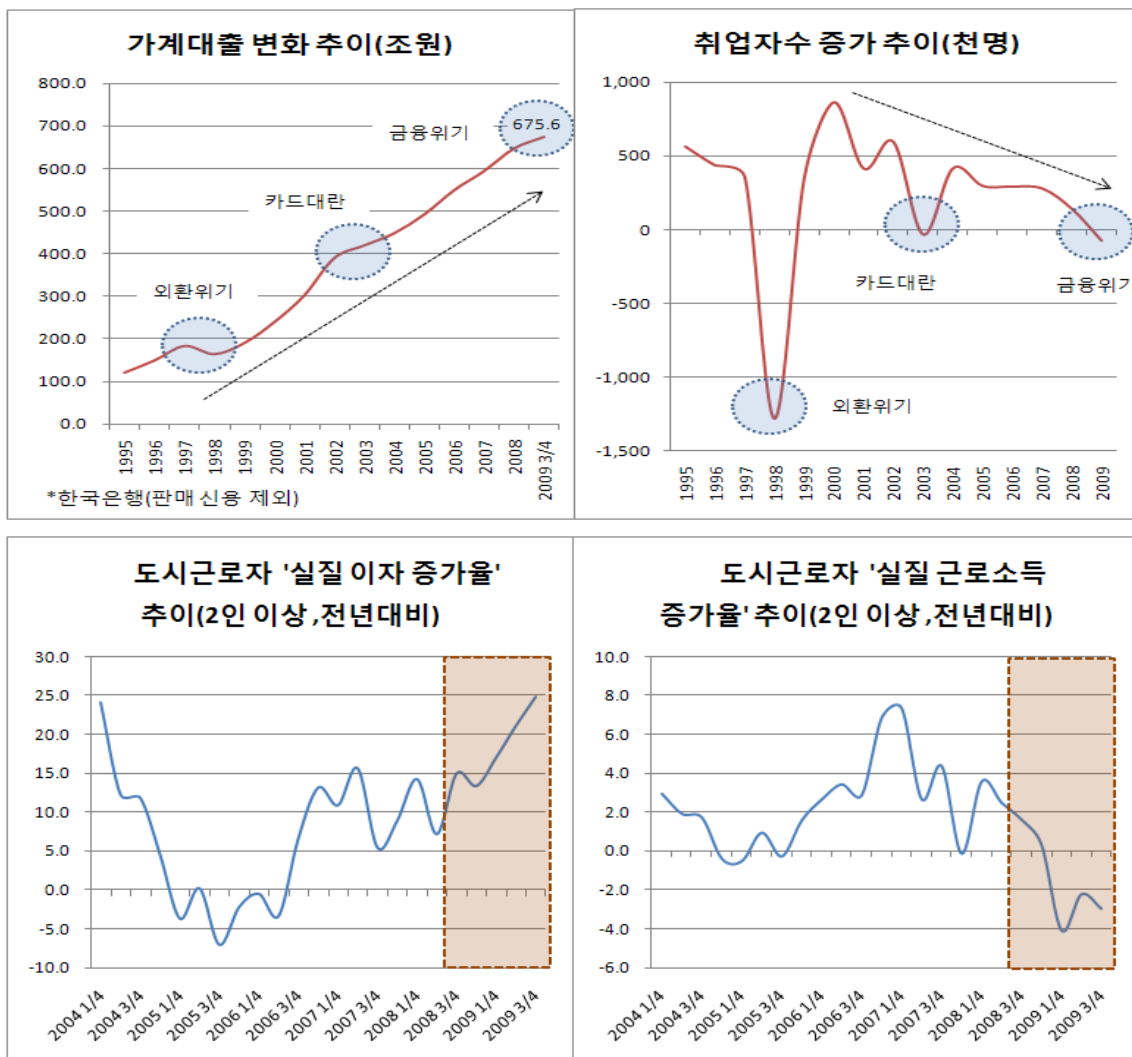
- 또한 가계 부채에 대한 각 가정의 대응능력을 알아보는 핵심 지표가 자산 가격에 대한 안정성인데,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의 약 절반 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어 주택 가격 동향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예외적으로 주택 거품이 빠지고 있지도 않고 주택담보 대출이 줄어들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지난 4/4분기에도 주택 가격 상승은 역사적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3. 고용 없는 성장의 현실화와 국가적 고용전략의 방향

- 2010년 글로벌 경제 이슈는 ‘금융’에서 ‘고용’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자 유낙하로 치닫던 세계경제를 극적으로 멈춰 세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 융회사의 부실을 국가로 이전시키고 경제 성장률 지표를 회복시키는데 일단 성공했지만 여전히 국가의 힘으로도 어찌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악 화되고 있는 고용상황이다.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에서도 월가의 연쇄 파산을 저지하면서 2009년 3분기 성장률을 플러스 3.5퍼센트(연율 기 준)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치솟는 실업률을 막지는 못했다. 2009년 마지막 12월까지 실업률은 두 자리 수인 10퍼센트 밑으로 내려오지 않 았던 것이다.
- 우리 정부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재정을 풀어서 정 부 투자를 감행하고, 민간 소비촉진을 지원했고 동시에 실업률 해소를 위한 재정투입도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 재정 1조 3000억 원을 풀어서 ‘희망근로’라는 이름으로 25만 개의 6개월짜리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정 부와 공기업, 중소기업 등을 통해 청년 인턴제 채용을 독려했다. 그 결과 마이너스 40만 명대로 추락할 것 같았던 취업자 증가수가 2009년 하반기 접어들면서 플러스로 반전되기도 했다.
-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만료 시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 문에서 이를 이어받아 고용을 창출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 다 시 정부가 나서서 단기 일자리 시한을 연장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진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2009년 11월로 끝나는 희망근로를 2010년 3월 에 한시적으로 10만 명 규모로 연장하겠다는 교육책이 그것이다. 청년 인턴제도 규모를 줄여 좀 더 연장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문제는 2010 년 상반기가 지나면 고용이 예전 상황으로 회복될까 하는 점이다. 그러 나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 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상황은 비관적이다. 결국 ‘고용문제의 장기적 성격’과 ‘정부 고용대책의 단기성’ 이 불일치되면서 재정지출은 계속되고 있다.



- 특히 짙을 점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 가운데 가장 빠르게 형편없이 실패로 돌아간 정책이 바로 고용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4대강 사업 등 토목건설로 9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첫 해인 2009년에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전 산업 부문 가운데 토목 건설에서 가장 크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연초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해 임금은 삭감되었지만, 실상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공기업을 동원해 추가 투자를 지시하고 각종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 집행을 독려했으나 민간 기업보다 먼저 채용한 인턴을 해고하는데 앞장섰다. 1조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서 겨우 6개월 동안 노인들에게 낙엽 쓸고 등산로 정비하는 일을 주었을 뿐이다. 엄청난 비용낭비와 엄청난 비효율이다.



- 최근 고용관련 토론회에서 한 연구자가 **경제 성장의 파생물로 고용확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장을 담보하는 전략, 즉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는데 이 역시 적극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⁵⁾ 그는 '고용이 성장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용이 1퍼센트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약 2퍼센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 결과 성장과 고용의 동반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의 시발점을 '성장이 아닌 고용'에서 찾을 것을 주문하고, <고용증가 → 소비 증대 → 성장 확대 → 고용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그의 주장은 2010년 우리 경제의 진정한 회복, 특히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경제 전략을 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부채에 의한 성장>에서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연간 8% 성장을 해도 중산층이 혜택을 보는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성공으로 볼 수 없을 것"(바이든 미국 부통령 2010.1월 발언)

- 성장률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플러스로 올라서고 있으며 주가는 50퍼센트 이상 급등했고 민간소비조차 마이너스를 벗어나고 있지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지표가 바로 국민들의 가계소득 지표다. 가계소득의 핵심 원천인 고용지표는 정부가 30만개 이상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7.2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OECD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쁠 수밖에 없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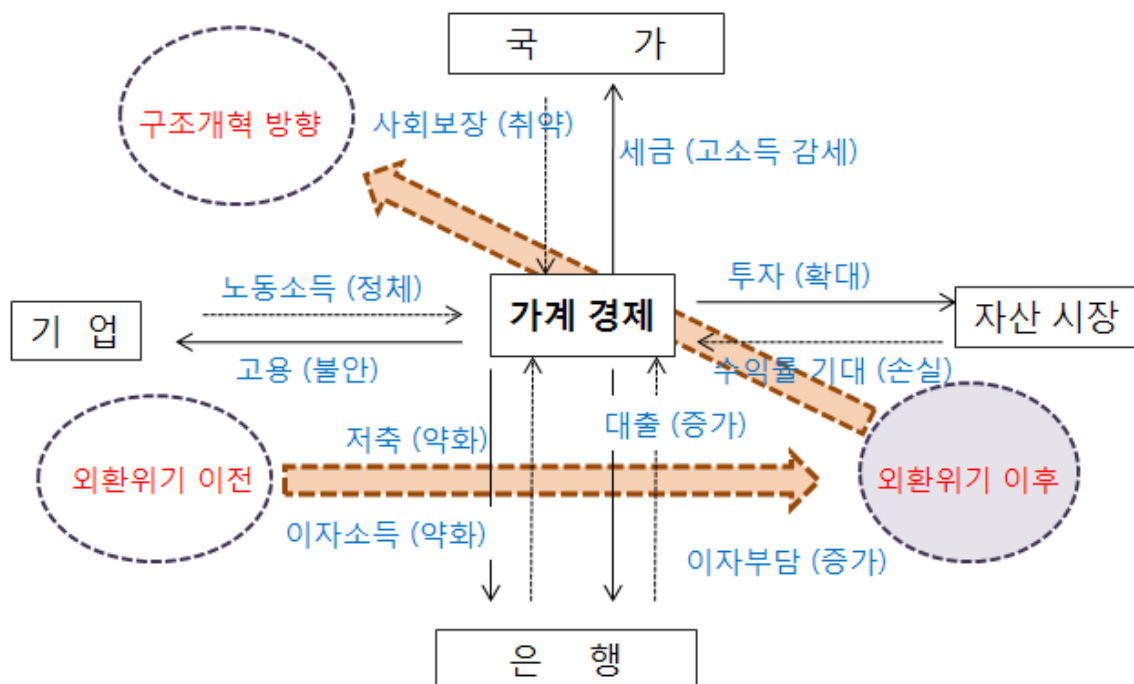
5) 장동구 한국은행 연구위원, '성장, 임금과 고용의 인과관계', <국가 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9.12.4



들고 나왔지만 이로 인해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끼는 국민이 55.8 퍼센트에 달하는 것을 보면 굳이 데이터를 인용하지 않아도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문제는 이 격차가 2009년 하반기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2010 년에도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형적인 실적 쌓기 방식의 정부 경제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다 경제가 점점 더 ‘고용 없는 회복’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고 기업 실적이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면 모든 경제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호전될 것이라는 가정은 이제 근본적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가계를 중심으로 본 경제 주체들의 관계



- 국내총생산(GDP) 성장이나 주가 상승 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정책 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틀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GDP는 경제 분석의 좋은 지표가 아니”라고 선언 하면서 “금융이윤과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성장은 허구”라고 지적하고 있는 스티글리츠 교수의 주장은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⁶⁾

-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의 해묵은 논쟁이었던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 우선이냐 고용 우선이냐’, ‘기업실적 우선이냐 가계 소득 우선이냐’ 하는 의제도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도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인가 분배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성장 전략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경제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 것이다.
- 앞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면 국가와 기업, 은행과 자산시장들이 가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가계 경제를 희생양으로 기업과 은행, 자산시장이 팽창하고, 그 결과 외형적인 GDP가 올라갔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고, 국가와 기업, 은행과 자산시장이 가계 경제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저축에 의한 성장>, <교육에 의한 성장>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산시장에 의한 성장>, <부채에 의한 성장>이 일상화되었고, 그것이 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성장 동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고용을 통한 성장>을 기본 축으로 하여 부채를 줄여나가고 거품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3대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고용 개혁]

- 첫째, 가계경제가 작동하는 시작점이자 원천이 되는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소득의 안정적 상승을 위해 대대적인 고용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 2009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가 금융이었다면 2010년은 고용으로 이동할 조짐이 이미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의 회복 과정에서도 고용만은 부진과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용 없는 회복 조

6) 2010년 1월 2일 전미경제학회에서 스티글리츠 교수 발언



짐마저 뚜렷한 만큼 고용개혁으로 고용을 통한 성장 전략을 새로이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구조적 고용 불안과 노동소득 정체가 주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에 있다고 지목되는 만큼 노동 유연화 정책기조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 특히 고용의 개선을 주력 부문인 수출과 대기업에 기대는 것은 난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부문의 고용창출력은 10년 전의 약 1/3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10대 대기업은 지난 해 불과 2400명의 고용을 늘렸을 뿐이다. 다른 민간 부문도 올해 경기 순응적 고용 형태를 지속하면서 고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노동시간 확대와 임금 삭감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공부문 고용의 역할을 극대화해 단기적으로 고용악화에 대응하는 기조를 지속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부 부문 고용은 약 3퍼센트로써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1/2~1/3 수준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는 저소득층에 밀집되어 있어 영리기업이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그렇다고 대기업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은 첫째, 초과 노동으로 생산 확대에 대응하는 관행을 멈추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의 여지를 만들고, 둘째, 대기업 사업장이 이미 노동자 5명 중 1명 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늘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며, 셋째, 수익률 회복이 달성된 만큼 납품단가를 조속히 인상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증대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업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고용 기여세’ 또는 ‘사회 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여 국가적 고용 확대의 재원 마련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고용률 60% 회복’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여 재원을 집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금융 개혁]

- 둘째, 지난 수십 년 동안 실물을 뛰어넘는 과도한 팽창으로 이번 금융위기의 주범이 된 바 있고, 지금까지 가계경제를 도와주기보다 가계경제의 희생을 대가로 승승장구해온 금융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하는 금융개혁을 지체 없이 단행해야 한다. 이미 한국경제 최대 위협요인으로 가계 부실을 꼽은 상황에서 높은 가계 부실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은행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부터 은행들이 다시금 공격적인 수익경영의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
- 나아가 세계적으로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가 깨지지 않는 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은행 쪼개기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글로벌 메가뱅크 움직임이 재연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된다.
- 가계 부실위험 관리와 함께, 한국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의 하나인 '외국 자본 유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을 제외한 유럽 선진국들은 아직 검토 수준이지만 국제적 단기 자본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30년 전에 제안된 토빈세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주요 신흥국가들이 외국의 단기자금 유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신흥 대국들인 BRICs 국가들과 경제 침체정도가 약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 외국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외국자본 단기 유출입에 대한 거래세 도입:**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의 움직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때문에 자본시장의 불안정은 언제나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외환보유고 축적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대안이 되지 못했다.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경상수지 관리뿐 아니라 ‘자본수지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이다. 자본수지 관리를 위해 우선 ‘과세’를 통한 외국자본의 단기 유출입 통제를 해야 한다. ‘일국적 토빈세’라고 할 수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 거래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는 브라질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속속 도입했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본시장 자유화 정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 자금의 영향력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본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 **국내 자산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 부활:** 자본 자유화 정도가 매우 높은 한국은 단순히 과세를 통한 유출입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외국인 비중의 ‘절대 규모’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된다. 외국인 지분율이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규제를 도입을 시작으로 주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무분별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방어를 위해 단기 채권에 대한 외국인 거래규모 제한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
- ▶ **외환 파생상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한국에서 금융파생상품이 문제가 되었다면 미국처럼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이 아니라, 전체 파생상품의 절반에 육박하는 외환 파생상품이었다. KIKO로 상징되는 각종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국제 외환거래 가운데 단지 1.5퍼센트만이 실물거래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98.5퍼센트는 순수하게 금융부문 내에서 투자(투기) 수익을 좇아 움직이는 자금이고 대부분 선진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단순한 환 헤지 비율 제한을 넘어서 실수요 증빙 규제, 환투기에 대한 조사와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하도록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 환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고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영향이 큰 NDF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로써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할수록 환 헤지 수요가 커지고 이것이 다시 불안정성을 키우는 악순환을 막도록 해야 한다.
- ▶ **외국계 은행에 대한 추가적 규제 강화:** 국내 시중은행들의 무분별한 외화차입

도 문제지만 외국계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환차익과 금리차익을 노리고 운영하는 달러차입이 더 문제다. 이번 정부 외환건전성 대책 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규제책을 강구해야 한다.

▶ **국제사회의 토빈세 논의 적극 참여:** 투기적 수익을 노리고 움직이는 국제 금융 자본의 피해는 이제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진정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토빈세 논의를 공식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적인 자본 이동 규제를 한두 나라만 해서는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신흥 개방국인 한국이야말로 국제적인 토빈세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흐름도 맞추고 우리의 국익도 도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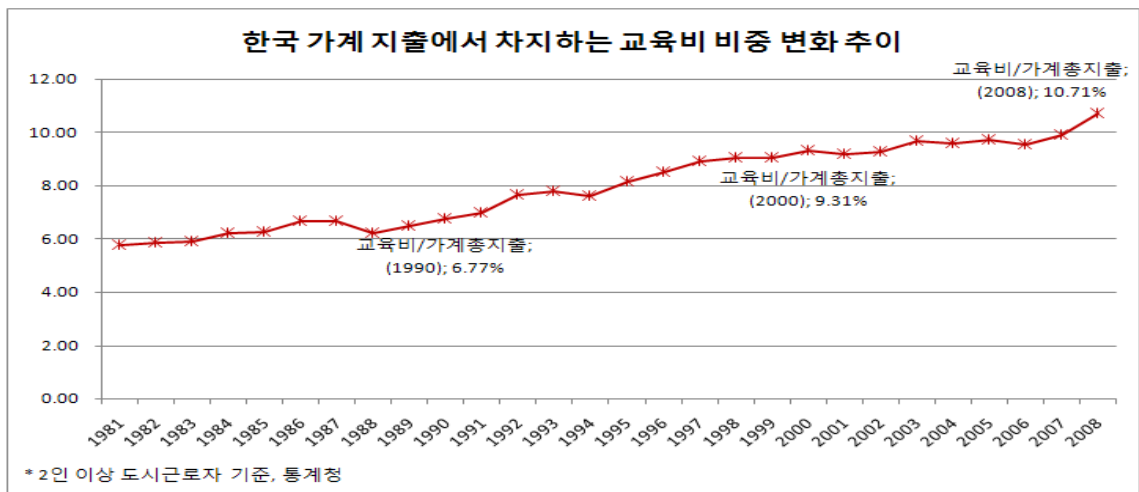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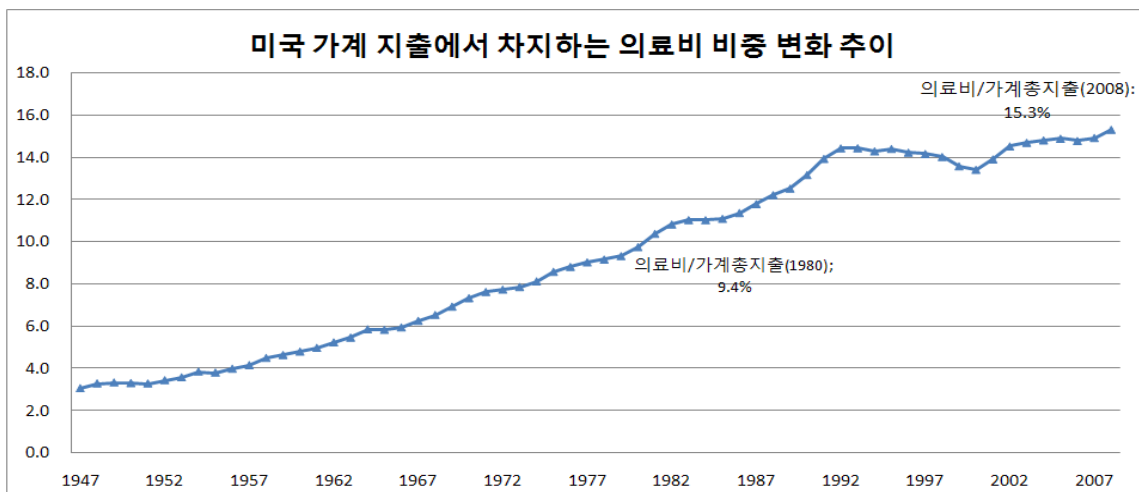
▶ **아시아 대안 통화체제 논의에 참여:** 현재 세계는 불안정한 달러기축통화체제를 대신할 대안 통화체제 논의가 활발하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국제 통화체제에서 우리의 자유변동환율체제는 지극히 고비용, 저효율의 체제가 되고 있고 환 투기 세력에게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교수도 “자유변동 환율제에 대해 확립된 사실이 하나 있다면 환 투기하는 세력에게 가장 편리한 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대 박영철 교수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이 움직이는 자유변동 환율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 통화체제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사회 안전망 개혁]

- 셋째, 그 동안 한 번도 가계경제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본 적이 없는 국가가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계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이번 경제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사회 보장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가계 경제의 안정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은행과 자산시장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 가계경제가 앞으로는 기업 및 국가와의 안정적인 관계 아래 정상화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국민 생활이 향상되도록 경제 전략을 펴야 한다.**



-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 동안 그나마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미흡하지만 사회복지 분야를 꾸준히 확장해왔던 것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대폭 약화되면서 사회보장시스템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공적 시스템으로 구축된 의료보험시스템이 의료 민영화로 무너질 위험에 빠져 있으며 사교육 팽창으로 가계 부담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 특히 소득은 줄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지출 가운데 줄일 수 없는 이른바 경직성 지출이 바로 교육비다. 이미 우리 국민이 지출하는 교육비는 이미 식생활비를 훨씬 추월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2009년 상반기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가 매달 지출하는 식생활비가 평균 29만원인데 교육비는 34만원을 넘고 있다.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자녀 교육비에 쏟아 부어야 할 비용이 더 큰 것이다.



- 의료비가 미국 경제와 미국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짐이라면, 미국 의료비에 버금할 정도로 심각하게 한국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교육비이다. 미국의 의료비처럼, 한국에서 교육비가 부담이 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그 경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년 전인 1990년에 가계 총 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퍼센트를 넘지 않았던 교육비가 2008년에는 10.7퍼센트까지 상승했고, 2009년에는 다시 11퍼센트까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단계에서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없는 한 교육비는 미국의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종래에는 2009년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국론 분열을 감수하면서 힘겹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재연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교육 사이에는 분명한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자 모두가 공적 체계가 무너지면서 비용부담이 팽창하고 있고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으며, 오랜 기간 누적되어서 쉽게 개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교육비 지출도 소비지출이니 소비가 늘어서 내수를 살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교육과 의료 서비스 구입도 국민 후생을 늘리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서비스 품목에 비해 타 산업에 미치는 전, 후방 연쇄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려면 가급적 교육과 의료부문 지출을 줄이고 여타 부분의 소비지출을 늘이는 것이 좋다고 평가하고 있다.**⁷⁾ 결국 교육에 대한 과도한 가계 지출이 그나마 전체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내수 진작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규제 풀린 신자유주의 경제가 특히 금융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지난 30여 년 동안이 자유의 시대였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은 ‘구제의

7) <이데일리>, 2009.10.18



시대'가 되었다. 파산 위험에 빠진 금융회사들은 속속 정부의 규제 금융을 받았으며 기업들도 공적 자금을 포함한 광범한 정부지원을 받았다. 얼어붙은 소비시장에서 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 지원 덕분에 실적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물론 대가는 비쌌다. 규제를 해준 비용 부담 탓으로 정부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짊어지게 되었으며 가계는 소득감소와 부채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규제 덕택에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잡았다면 마땅히 규제의 시대에서 '규제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그들에게 자율적 조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지금, 똑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의 틀에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얻는 필수적인 규제 대상은 세 가지 영역이다. 첫째는 금융에 대한 규제이고, 둘째는 고용 유연화에 대한 규제이며, 셋째는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규제이다. 금융을 규제의 틀 안에서 작동시켜 스스로 과잉 팽창하는 것을 제어하고 실물산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구조적 고용불안과 소득 정체를 상시화해 부채에 의한 가수요로 내몰게 한 노동시장 유연화 체계를 규제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보건, 복지를 포함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 특히 금융시장에 내맡겨 사회 안전망을 사실상 해체하는 구조를 개혁하고 공적인 사회 서비스를 재구축해야 한다.

세 가지 규제를 제대로 실시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 대가로 세 가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부채로부터의 자유이다. 700조가 넘는 각종 부채 부담에 억눌리고 이자 비용에 시달려왔던 가계 경제를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가정으로 바꿀 수 있다. 둘째는 고용 불안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청년에서 중 장년,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취업걱정과 해고 걱정으로 일생의 속박을 받게 된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권리'를 되찾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기초적인 사회생활, 특히 교육 부담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당연히 사회의 공적인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할 사회 보장과 보건, 교육을 지금껏 개인적 책임과 부담으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틀을 벗어나야 한다. 교육 부담으로 가계 경제가 왜곡되고 사회 전체가 비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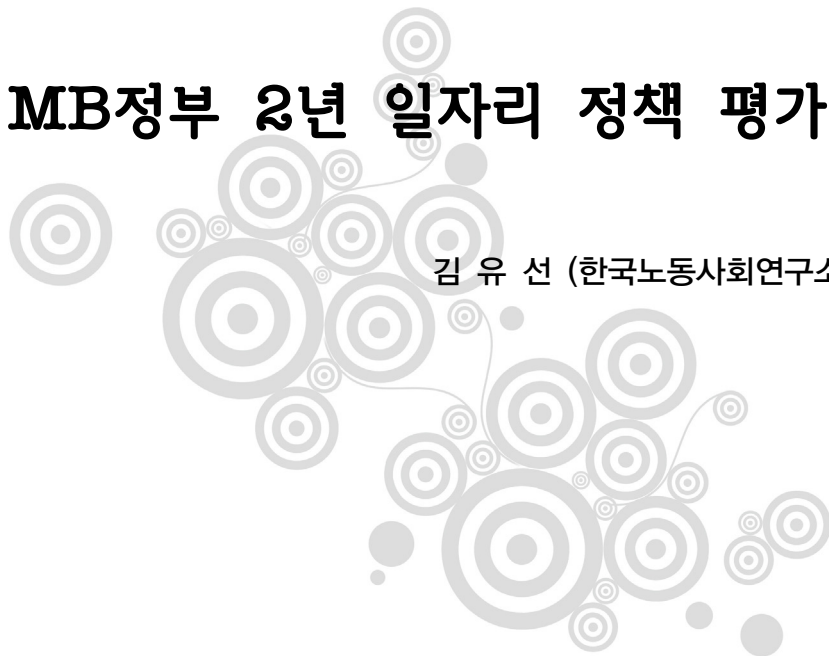
부채로부터 자유롭고 고용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우며 교육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 표상일 것이다.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토론회 I

토론회자료 I

MB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MB정부 2년 일자리 정책 평가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I. MB정부 일자리 정책

가. 2007년 대선 공약

○ 2007년 대선 공약 “연 7% 성장으로 일자리 300만개(매년 60만개) 창출”

- (비판)

- ① 성장 7% 불가능.
 - ② 설령 7%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자리 300만개 불가능.
 - ③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저임금
- ⇒ 이명박 후보의 경제 살리기 ≠ 서민경제 살리기

나. 2008년 상반기

○ 2008년 상반기(인수위, 이명박 정부 출범)는 일자리정책이라 할 만한 게 없음.

- 성장이 유일한 해법. “경제성장 → 일자리 확대”

⇒ 재벌(건설업자) 위주 성장정책 + 노동시장 유연화(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 2008년 하반기 “경제위기-고용위기” 심화되자, 노동정책 실체 드러남.

(1) “747-일자리 300만개” 공약 폐기, “녹색뉴딜(녹슨삽질)-일자리 96만개” 대체

- 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건설업자 일거리 만들기”이고, ② 양적으로 “일자리 수를 과대포장”하고, ③ 질적으로 “단순노무직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인 점에선 동일.

(2)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시도

-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7월 고용대란설’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한 것은, ① ‘법=규제’라는 시장근본주의 사고와 ②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론에서 비롯.

- ‘백만 고용대란설’ 사실무근 판명. 노동부 조사결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62.4%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효과 뚜렷.

(3) 최저임금법 개정(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수습기간 연장(3월→6월), 숙식비 제외, 공익위원 단독결정, 지역별 차등)?

- “최저임금을 내리면 일자리가 는다”는 단순무식한 시장근본주의 사고(법정최저임금=규제)에서 비롯.

(4) 공공부문 인원감축, 청년인턴제 도입

- 가뜩이나 일자리가 모자라는 터에, 공공부문 인원감축 할 땐가?

- 청년인턴은 최대 11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자리. 2010년 내년은?

- 2009년 대학 졸업자들,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면 ‘잃어버린 세대’ 될 판.

(5) Job/Work Sharing

- 본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나누자는 것”으로, 줄어든 임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고통분담의 핵심.
-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온데간데없고 ‘임금삭감’으로 전제가 바뀌면서, “이번 기회에 임금을 삭감하자”로 본말이 뒤바뀜.

cf. 공기업, 대기업: 대졸초임 삭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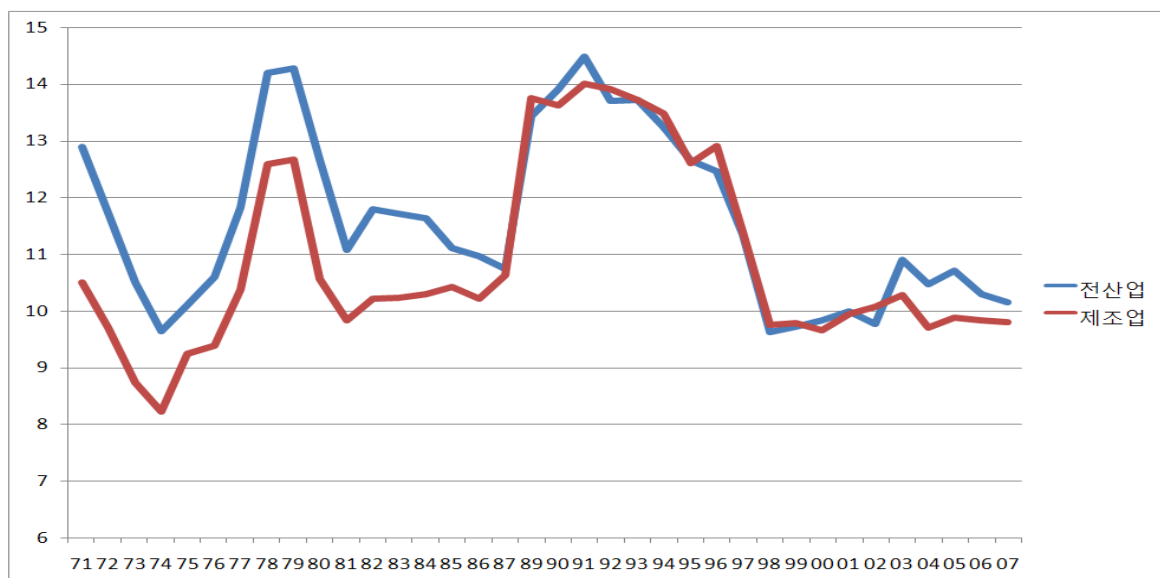
○ 이상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정규직 일자리는 줄이고,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자”로 요약할 수 있음.

- 추진하려는 사안을 합리화하고 밀어붙이는 근거로 ‘일자리 늘리기’ 사용.
예: 미디어 관련법, 제2롯데월드 등
- 5월 7일 이명박 대통령, ‘노동 유연성 문제 해결을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강조.

○ 임금을 깎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나?

- No. 가계수지 악화 → 내수잠식 → 일자리 축소

<그림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1971~2007년, 단위:%)





라. 2010년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고용률을 경제정책 핵심지표로 삼겠다.
-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겠다.
- 올해 일자리 25만개 늘리겠다.
- * 경제성장이 일자리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

○ 그러나 "more job, better job"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보이지 않음.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서 전문인턴제(고졸이하 미취업자 대상),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 세액공제), 고용우수기업 표창,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등은 긍정적.
- Job-sharing, 교대제 개선 등 실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음.
- 중장기대책은 서비스산업 선진화(규제완화), 노동시장 효율화(임금, 근로시간 유연화, 안정성 제고방안 없음), 민간고용서비스 확대(공공 고용서비스 확대방안 없음)에 초점. 실효성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됨.

II. MB정부 2년 일자리 성적표

가. 일자리(취업자) 증감

○ 참여정부(2005~7년) 때는 매년 28~30만명 증가

- MB정부 : 2008년 14만명 증가, 2009년 -7만명 감소.
- 2009년 공공행정(희망근로) 제외하면 -26만명 감소

○ 여성, 저학력층 감소세 두드러져.

- 2009년 고령자 12만6천명 증가는 희망근로 때문.

<표1> 인적속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2005~9년, 단위: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취업자	299	295	282	144	-71
(공공행정제외)	276	285	286	101	-263
남자	137	114	163	96	31
여자	162	180	120	48	-102
청년(15~29세)	-128	-180	-67	-119	-127
장년(30~54세)	241	299	145	186	-70
고령(55세이상)	188	175	204	77	126
초졸이하	-55	-60	-41	-99	-116
중졸	-49	-22	-94	-98	-84
고졸	42	-17	4	-124	-168
전문대졸	132	119	185	141	86
대졸이상	230	273	230	322	213

○ 자영업자등 비임금근로자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증가, 일용직 감소; 임시직 2만명 증가는 희망근로 때문.

<표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2005~9년, 단위: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임금근로자	291	366	419	236	248
비임금근로자	8	-70	-139	-91	-319
상용직	292	287	416	387	383
임시직	-26	87	29	-93	22
일용직	24	-8	-26	-57	-158
고용주	-15	-32	-70	-35	-10
자영업자	77	-5	-16	-44	-249
무급가족종사자	-54	-33	-53	-12	-60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감소세 뚜렷

-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 의료보건복지) 증가세 뚜렷

- 공공행정 19만명 증가는 희망근로 때문



○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은 감소, 사무전문직은 증가

- 단순노무직 15만명 증가는 희망근로 때문

<표3> 산업 직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2005~9년, 단위: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C 제조업	-47	-73	-43	-51	-127
F 건설업	-5	20	16	-37	-92
G 도매 및 소매업	-56	-35	-38	-42	-31
H 운수업	29	28	54	1	-1
I 숙박 및 음식점업	1	-9	0	-5	-108
J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32	13	-17	-7	25
K 금융 및 보험업	8	41	20	15	-55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43	4	5	-16	1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	56	21	54	88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56	77	135	20	-30
O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23	10	-4	43	192
P 교육 서비스업	59	98	38	44	4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9	42	59	102	156
1 관리자	3	0	-1	-52	-3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3	243	210	332	44
3 사무 종사자	79	-4	16	98	104
4 서비스 종사자	28	-16	-23	69	-136
5 판매 종사자	-78	-11	-5	-103	-19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9	-33	-53	-51	-45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	29	-27	-23	-148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5	5	4	-61	-17
9 단순노무 종사자	75	80	161	-63	148

나. 고용률 감소

○ 참여정부(2005~7년) 고용률 59.7~59.8%

- MB정부 : 2008년 59.5%, 2009년 58.6%로 2년만에 1.2%p 하락

<표4> 고용률 추이(2005~9년, 단위: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15세이상인구(천명)	수	38,300	38,762	39,170	39,598	40,092
	증가	583	462	408	428	494
취업자(천명)	수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증가	299	295	282	144	-71
고용률(%)	비율	59.7	59.7	59.8	59.5	58.6
	증가	-0.1	0.0	0.1	-0.3	-0.9

다. 실업자 증가

○ 정부발표 공식 실업자(실업률)

- 참여정부(2005~7년) 실업자 78~89만명, 실업률 3.2~3.7%
- MB정부(2008~9년) 실업자 77~89만명, 실업률 3.2~3.6% * 거의 변화 없음.

○ MB정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60세 미만)과 18시간미만 취업자 급증

○ 사실상 실업자(실업률)

- 참여정부(2005~7년) 실업자 300~302만명, 실업률 11.4~11.6%
- MB정부(2008~9년) 실업자 312~346만명, 실업률 11.7~12.9% * 크게 증가.

<표5> 실업률 추이(2005~9년, 단위: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정부발표 실업자	실업자	887	827	783	769	889
	실업률(%)	3.7	3.5	3.2	3.2	3.6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준비생	457	525	546	598	591
	쉬었음(60세미만)	852	854	859	900	1,019
취업자	18시간미만취업자	804	821	835	850	963
사실상 실업자	실업자	3,000	3,027	3,023	3,117	3,462
	실업률(%)	11.6	11.6	11.4	11.7	12.9



Ⅲ. 일자리 정책 개선방향

○ 노동시장 상황: 노동시장 양극화 +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장기화)

○ 이명박 정부 정책방향: 저임금 비정규직(working poor)을 양산하는 low road

→ 내수잠식 → 일자리 축소 : 악순환

○ 대안: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창출을 목표로 하는 high road 추구

1) 신규 진입자 : 일자리 만들기(청년실업 대책)

○ 청년 인턴???

○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 만들기 어려움.

→ 공공부문(공공행정, 교육,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줘야

① 초중등학교에 교사 1명씩만 늘려도 1만명.

*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2009년)

	법정 정원	실제 확보한 정원	결원보충 신규임용(1~8월)	
			정규직	기간제
국공립	38만 1,134명	32만 2,502명	7,254명	2만4,854명
사립	8만 8,836명	7만 3,587명	1,402명	7,991명
합계	46만 9,970명	39만 6,089명	8,656명	3만2,845명

②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 2010년 시범사업 예산 24억원(간병인 324명, 지원대상 환자 1080명)

③ 고용안정센터 고용상담원 늘리기

* 현재 인력 3천명 + 인턴 1200명

○ 부동산 감세 효과(국회 예산정책처) : 앞으로 5년간 96조원

☞ 10조원 = 연봉 2천만원 일자리 × 50만명

2) 취업자 : 일자리 지키기

○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Work/Job Sharing +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 인력감축 중심 구조조정 재검토

3) 실업자 : 전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에서 실업대책 확대

○ 정책 우선순위: 대상 확대 → 기간 연장 → 수준 인상

- 청년, 자영업자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직업훈련 연계형) 실업부조(취업지원수당) 지급

4)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진

○ working poor 축소 → 내수 확대 → 위기탈출

<참고> 뉴딜이란?

○ 1930년대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민들 구매력을 높이고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업보험, 일자리창출, 사회보장, 최저임금제도 도입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 뉴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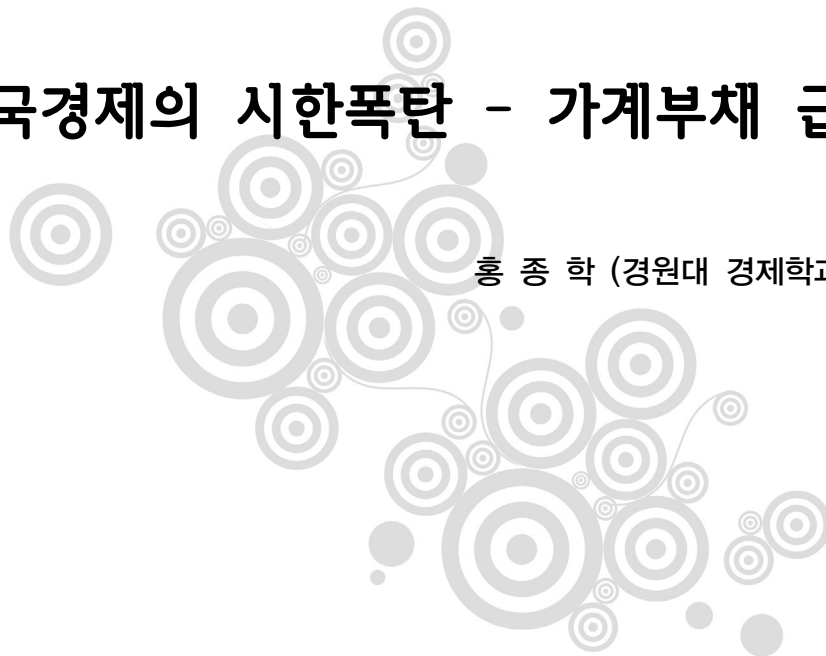
- 당시 미국 산별노조회의는 “대통령은 당신의 노동조합 가입을 원한다!(The President Wants You To Organize!)를 슬로건으로 노동자들 조직화.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
- 올해 7.25달러인 최저임금, 2011년까지 9.5달러(평균임금의 50% 상회)로 인상
-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야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가 증진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
- 브라질 정부는 지난 2월 1일 최저임금을 415헤알에서 465헤알로 인상.
- 내수시장에 93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가져 왔고, 4천3백만명에게 직간접적인 소득확대 효과가 나타나 소비가 늘고 산업생산과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토론회 I

토론회자료 II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 가계부채 급증

홍 중 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 가계부채 급증

홍 종 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1. 부채 경제의 문제점 심화

-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표면화되어 가계와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진다면 다시 재정으로 보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재벌과 부자에 대한 특혜성 감세,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토목공사 강행으로 재정의 부실화를 악화시켰다. 향후 가계부채 부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의 회복이 중요하다.
-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외채문제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 대외채무 변제를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과 달리 민간의 해외자산 보유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어 금융권의 부실이 예상되고, 국가재정이 부실화되면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조속히 가계, 금융권, 재정의 건전화를 회복해야 한다.

대외투자 현황

단위: 억달러

	2007말	2008말 ^r	2009.6말 ^r	2009.9말 ^p	분기중 증감	거래요인	비거래요인
대 외 투 자	5,967.9	4,954.3	5,311.5	5,776.9	465.4	293.1	172.2
직 접 투 자	747.8	979.1	1,039.3	1,077.8	38.4	11.7	26.8
증 권 투 자	1,586.1	751.1	841.1	981.5	140.4	20.7	119.7
지분증권(주식)	1,048.6	478.8	584.5	721.3	136.8	27.4	109.4
부채증권(채권)	537.5	272.3	256.6	260.2	3.6	-6.6	10.3
파생금융상품	23.4	103.6	61.7	75.5	13.8	-	13.8 ¹⁾
기 타 투 자	988.5	1,108.2	1,052.0	1,099.7	47.6	21.9	25.8
준 비 자 산	2,622.2	2,012.2	2,317.3	2,542.5	225.1	238.9	-13.7
대 외 채 권	4,205.6	3,478.8	3,721.6	4,004.9	283.3	259.9	23.3
단 기	3,331.1	2,802.2	3,038.9	3,294.9	256.0	-	-
장 기	874.5	676.6	682.7	710.0	27.3	-	-



2. 가계부채의 구조적 이해

- 발제자의 5쪽 그림은 가계부채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발제자께서 6쪽에서 밝힌 대로 한국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55%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대신 국내총생산으로 국제비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계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득은 가처분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소득을 포함한 국내총생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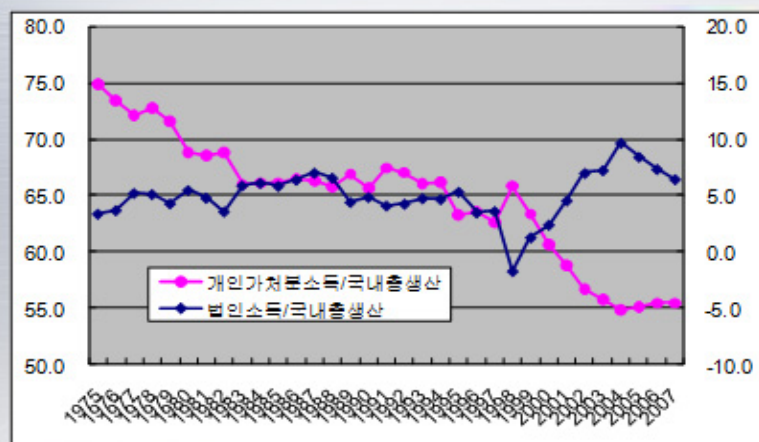
개인 금융부채의 국제비교 (2007년)

	한국 (2008)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GDP대비	78	100	100	65	48	98
(주택관련)*	41	76	84	37	34	84
개인처분가능소득대비	140	136	159	112	55	159
(주택관련)*	73	104	134	64	36	136

주 : *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한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포함)
자료 : 각국 국민계정, Lehman Brothers

6

개인가처분 소득과 법인 가처분 소득 추이



29

- 가처분 소득의 비중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경제개발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미국은 75% 수준이고 북구 복지국가처럼 국가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50% 대이다.



- 가처분소득 대비 140%에 달하는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미국 수준을 넘어섰다. 2008년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140% 내외였음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매우 위험하다.
- 다만 한국의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채보다는 이자만 상환하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출 만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금융경색으로 인해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때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부채

- 소득이 높은 4, 5분위가 부채의 69% 자산의 76%를 보유하여 절대액수로는 고소득층이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 이는 대체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이며, 따라서 한국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다.

부채가구의 재무 현황(2007년)

(만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가구수	966	967	967	967	967	4,834
부채가구수	234	383	462	516	508	2,103
부채가구 비중(%)	24	40	48	53	53	44
부채	2,128	2,676	3,492	4,598	9,070	4,899
가처분소득	661	1,629	2,623	3,802	7,613	3,806
금융자산	172	244	576	1,087	3,282	1,289
총자산	5,809	8,785	13,375	22,086	47,449	22,638
부채보유 비중(%)	5	10	16	23	46	100
자산보유 비중(%)	3	7	13	24	52	1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자료

- 만약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가계 부실화로 연계되어 가계와 금융이 동시에 부실화되며, 동시에 부동산시장 붕괴를 다시 촉발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 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면 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을 통해 위기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게 되는데, 지난 몇 년간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었다.
- 결론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장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4. 서민계층의 부실화와 가계부채

- 액수는 작지만 서민계층의 가계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더욱 높다. 1분위와 2분위 가계의 절반 이상이 적자 가계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지속된 상황이다.

소득분위별 재무건전성 지표 및 적자가구 비중(2007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부채/가처분소득(배)	3.22	1.64	1.33	1.21	1.19	1.29
부채/금융자산(배)	12.37	10.97	6.06	4.23	2.76	3.80
부채/총자산(배)	0.37	0.30	0.26	0.21	0.19	0.22
부채상환/가처분소득(%)	28	14	12	11	11	12
적자가구 비중(%)	68	51	31	18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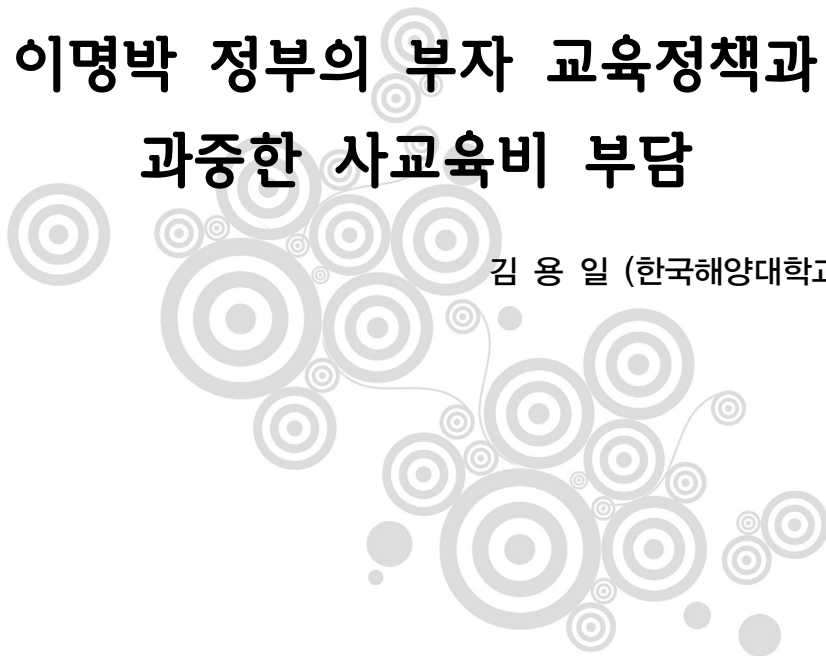
14

자료 : 한국노동패널자료 분석자료

- 이미 가처분소득 대비 28%(1분위), 14%(2분위)를 부채상환에 쓰고 있으므로 서민계층의 소비여력은 저하된 상태이다.
- 따라서 서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면 지원자금은 곧 금융권으로 회수되고 실제로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의 소득을 높이고 동시에 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대폭 줄여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정책이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 교육정책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김 용 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명박 정부의 부자 교육정책과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김 용 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 사교육비 현황

- <표 1>에 제시된 사교육비는 심각한 가계 부담과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라 할 수 있음(교육과학기술부, 2009. 12. 12 참조)

<표 1> 최근 사교육비 규모 조사 결과(KEDI/ 통계청)

구 분	'01	'03	'05	'07	'08
총 사교육비(억원)	106,634	136,485	176,774	200,400	209,095

* '01년, '03년, '05년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결과, '07년, '08년은 통계청 조사 결과

* '01년~'06년(KEDI) : 연평균 12.1% 증가, '07년~'08년(통계청) : 연평균 4.3% 증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12), 1쪽

-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유지 또는 증가하여 가계에 경제적 고통
 - ※ '08년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 9천억 원으로 '07년 20조 4백억 원보다 4.3% 증가
- 저출산, 기러기아빠, 가정해체, 계층간 위화감(가난 대물림 고착화) 등과 같은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교육비에서 출발
- 사교육비의 급격한 증가에 반해 <표 2>에서 보듯 정부의 교육지출은 답보 상태를 보이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2010년 예산에서 교육예산 1.2% 감소)
- 교육의 과정(process)은 물론 교육 결과(outputs)의 사교육 의존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 이와 관련하여 “돈 있으면 외국 보내고 돈 없으면 희망이 없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교육예산은 오히려 줄이면서 서민에게 다가가고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⁸⁾(황성현, 2009. 10. 13: 46)이라는 지적을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음

<표 2> 최근 정부의 교육비 지출 규모 변화 추이(2007~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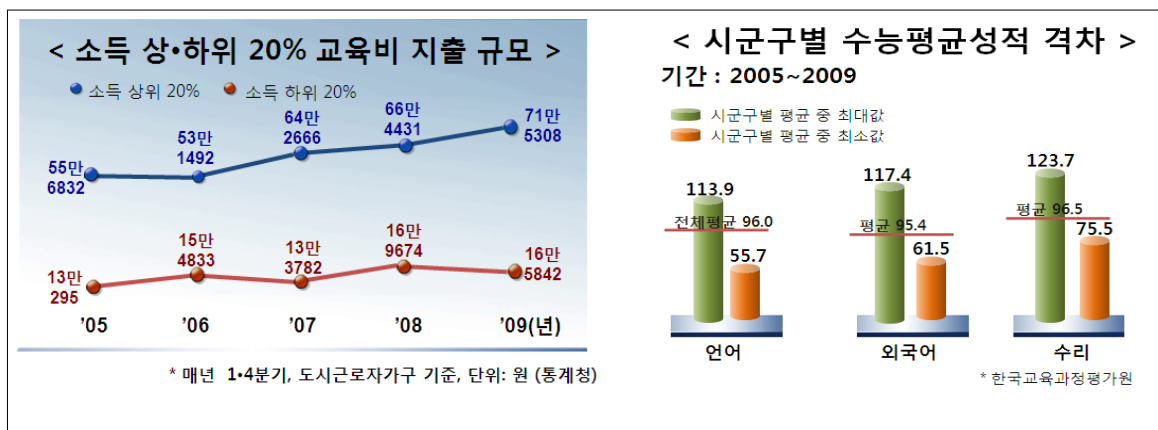
(단위: 조, %)

구 분	'07	'08	'09	'10
교육지출(A)	31.4	36	39.2	37.2
총지출(B)	238.4	262.1	301.8	291.8
교육지출 비율(A/B)	13.2	13.7	13.0	13.0

* '09년은 추정 기준, '10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황성현(2009. 10. 13), 21쪽에서 재구성

- 아래의 그림을 제시하면서 “서민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12. 12: 2)면서도 예산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의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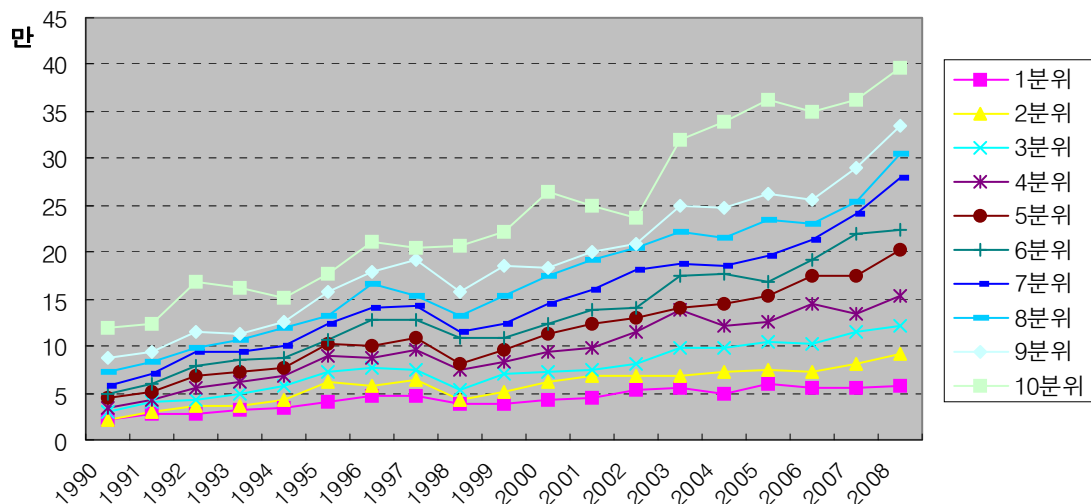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12), 2쪽

- 8) 그러면서 그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과 더불어 세금을 제대로 거두어서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공교육과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길만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재정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집중적인 투자방안을 담은 「교육발전 10개년 계획」(가칭)과 같은 장기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할 시점”(황성현, 2009. 10. 13: 46)이라고 함

- “경제위기의 여파로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수요가 증가”(교육과학기술부, 2009. 12. 12: 2)한다는 진단이 무색할 지경임
-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년층 취업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교육과학기술부, 같은 면 참조)
 - 실업률 : 전체 ('08) 3.0% → ('09) 3.8%, 15~29세 청년층 ('08) 6.9% → ('09) 7.6%
- 정규교육 이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
 - 청년층(15~29세) 졸업·중퇴자 중 취업 경험자는 취업까지 평균 11개월 소요,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경우는 17.1%에 불과('09.5, 통계청)

2. 사교육비 계층 간 격차 변화 추이

○ 소득 10분위별 사교육비 격차 추이의 특징



* 공식 사교육비는 2007년과 2008년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유사 사교육비(교재비+ 기타 교육훈련비) 데이터를 활용함(2008년도 불변가 기준)

자료: 송경원(2009. 5. 14), 2쪽

-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중상위층이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면서 격차를 키움. 곧 사교육비 격차를 키우는 주요 계층은 중상위층(송경원, 같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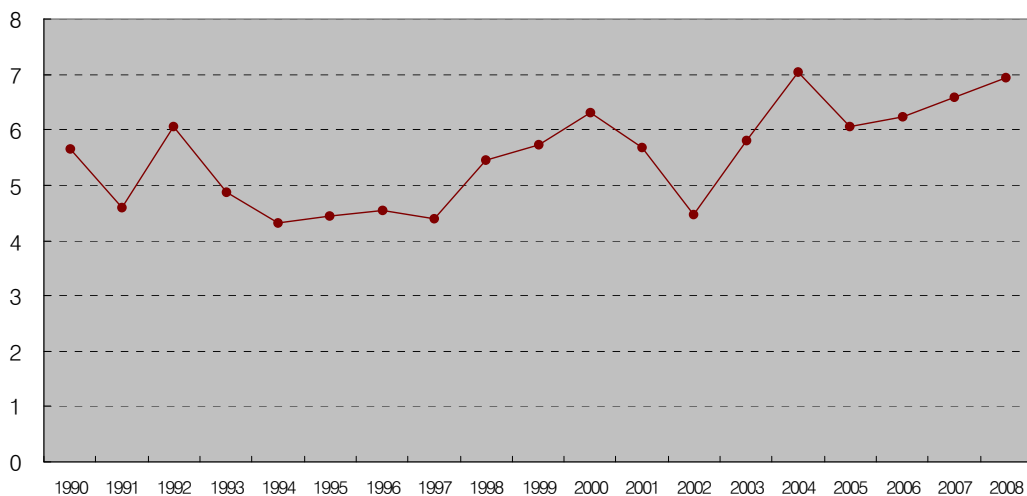
- 2001년 3월 특목고 지정·고시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관하여 외고 설립이 확대된 이후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한층 더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쉽게 말해 부잣집 아이들은 양질의 학교교육에 더하여 비싼 사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은 그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교육 현실임(김용일, 2007: 104)

○ 상위 10%는 하위 10%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IMF(1997년) 사태를 계기로 격차가 커짐(이하 표와 그림은 송경원의 같은 자료)

<표 3> 소득 상위 10%, 하위 10%의 사교육비 격차 추이(1990~2008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5.6배	4.6배	6.1배	4.9배	4.3배	4.4배	4.5배	4.4배	5.4배	5.7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3배	5.7배	4.5배	5.8배	7.1배	6.1배	6.2배	6.6배	7.0배	

- IMF 이전 4배를 넘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IMF 이후에는 6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2008년 현재 7배에 달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사교육비가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의 주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임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

- 입시경쟁에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가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과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김용일, 2007: 103)
-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사교육비 비중은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교육과학기술부, 2009. 12. 12 참조)

※ 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 : 고소득층(4.3%) < 저소득층(4.6%) < 중산층(5.6%) (LG 연구원 09.3)

3. 이명박 정부의 부자 교육정책과 사교육비 증가

-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집권 이후 줄곧 사교육비 경감을 주요 정책 의제로 삼고 있음.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12: 18-23))의 대통령 업무보고만 하더라도 “교육비 부담 경감 가시화”(과제 4)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 그 추진 전략으로 (1)사교육비 경감, (2)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적시하는 한편, “교육비 부담 없는 학교”·“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이란 구호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구호 따로 정책 따로”의 표리부동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앞에서 보았듯이 사교육비의 증가와 함께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 사교육비 경감은커녕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음

- 점수와 서열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기조⁹⁾: 일제고사 및 점수 공개 등으로 인해 초·중학교 학생이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경향 강화
- 계층 차별적인 학교서열화/시장화 정책: 외국어고, 자립(율)형 사립고의 부자이고 점수가 높은 학생 골라 뽑기(cream skimming)를 방조함으로써 사교육시장 팽창

9) 출산률이 높고 노동력 풀이 풍부할 때는 상대적으로 경쟁을 통한 선발(별)이 강조될 수 있으나 (초)저출산 기조로 접어들고 문제 해결적 직업능력(trans-employability)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는 자기존중감이 강하며 서로 협력하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듯한 구호로 포장하고 있긴 하나 산업화 초기의 선발과 경쟁 모델에 붙들려 있음



- 이른바 ‘대입 3단계 자율화’ 조치: 대학으로 하여금 고교등급제, 본고사 실시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 증가
- 위험한 실험: 검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도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 ‘보따리 사교육시장’ 창출

4. 정책 대안 탐색: 획기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 “사부담 공교육비 경감 노력” 없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학교와 대학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함
- <표 4>는 사부담 공교육비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초·중등교육 단계만 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세배에 가까운 사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음
- 고등교육 단계는 사부담률이 무려 76%에 달해 작금의 “대학 등록금 파동”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해줌

<표 4>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06년 현재)

(단위: %)

구 분	초·중등교육 단계			고등교육 단계			전체 교육 단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한 국	3.4	0.9 (20.9)	4.3	0.6	1.9 (76)	2.5	4.5	2.9 (39.7)	7.3
OECD 평균	3.4	0.3 (7.9)	3.8	1.0	0.5 (33.3)	1.5	4.9	0.8 (13.8)	5.8
EU19개국 평균	3.4	0.2 (5.6)	3.6	1.1	0.2 (15.4)	1.3	5.0	0.5 (9.1)	5.5

* 민간부담 하단의 괄호 수치는 비율임

자료: OECD(2009), 221쪽에서 재구성

-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정책은 더 이상 구실을 대지 말고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임
-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충실화(완전 무상교육화)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화
- 획기적인 대학 등록금 경감 대책 강구: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상환

☞ 이것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교육예산 감축 기조는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사교육 고통을 외면한, “구호 따로 정책 따로”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잘 알 수 있음

<표 5> 국·공·사립 초·중등학교의 학생 1,000명당 교직원수(2007년)
(단위: 명)

구 분	교원		전문 지원직	행정관리직		기능직	전체 교직원
	교원	보조교사 및 조교		학교 및 상위수준의 관리직	학교 및 상위수준의 행정직		
한 국	47.0 (43.8)	a (a)	m (0.9)	2.8 (2.6)	m (2.4)	m (4.3)	m (54.0)
핀란드	72.6 (70.1)	9.6 (5.5)	m (2.0)	3.0 (2.4)	m (8.2)	m (14.1)	m (102.4)
일 본	63.5 (60.2)	m (m)	5.5 (5.3)	5.6 (5.4)	4.9 (4.9)	5.8 (6.3)	85.3 (82.0)
프랑스	69.8 (70.2)	2.4 (m)	m (24.6)	4.7 (7.2)	5.3 (4.1)	8.3 (14.0)	90.5 (120.1)
이탈리아	97.1 (93.6)	3.2 (3.3)	10.8 (6.2)	2.7 (1.7)	14.0 (11.1)	28.6 (23.4)	156.4 (139.2)
OECD 국가평균	76.4 (72.8)	4.7 (4.3)	5.0 (6.4)	5.8 (5.3)	10.8 (7.3)	13.5 (17.9)	116.3 (107.4)
EU19 평균	82.7	3.0	5.2	5.3	10.0	154.4	125.0

* 하단 괄호안의 수치는 2003년 현재의 수치임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음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함
 * 프랑스의 2007년 현재 자료는 공립학교만의 수치로 2003년의 수치와 직접 비교할 수 없음
 자료: OECD(2009: 385); OECD(2005: 354); 교육인적자원부(2005. 9. 13: 37)
 등의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재구성하였음

-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면 관계상 “공교육 내실화”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正道(正道)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함
- 당연한 얘기지만,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학벌주의, 노동시장정책, 분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수적임
-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교육현실은 교육적 배려와 손길이 절실한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과소고용” 상태임
- 교원의 경우 2007년 현재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61.5% 수준이며, EU 19개국과 비교해서는 56.8% 수준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전체 교직원은 2003년 현재 50.3% 수준에 불과함)



- 국가가 아동과 학생의 삶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탄탄히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의 교육 현실은 실로 많은 것을 생각게 함
 - 점수와 서열 경쟁보다는 교육적 지원을 통해 예컨대 학습 부진아에게는 전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는 국어전담교사 배치하는 등의 전향적인 접근이 절실함
 -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교교육만으로 적어도 악기 하나쯤은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의 틀을 다시 짜나가야 함
- ☞ 계층차별적인 학교정책으로 귀결되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현 정부의 ‘학교 다양화’ 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학습의 다양화 · 개별화”를 대안으로 제시 · 정책화해야 함
- 이런 방향의 정책이 우리 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도이며, 또 그토록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4년에 걸쳐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인력을 확보 한다는 결심을 한다면, 교육부에서만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2009년 현재 초·중·고 교원만 40만 9천여 명, 사무직원 5만여 명)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자율형 사립고 등을 재정 책임을 면하고 어떻게 해서든 국가의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김용일, 2009: 295-304 참조)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12. 22).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
- 교육인적자원부(2005. 9. 13). 2005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발간(보도자료).
- 김용일(2007). 한국교육의 현황과 민주진영의 과제(특별기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17, 96-143.
- 김용일(2009).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개정증보판). 서울: 문음사.
- 김용일(2009. 4. 3). 초·중등교원 특별충원을 통한 팬찮은 일자리 창출. 국회의원 최재성·한국교총·전교조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 23-31.
- 송경원(2009. 5. 14). 1990-2008 사교육비 격차 자료(미간행 자료).
- 통계청(2009. 2. 27).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보도자료).
- 황성현(2009. 10. 13). 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2010년 예산안의 문제점. 시민주권, 민생민주국민회의. 국가부채 급증, 그대로 멈춰라!: 4대강 삽질예산을 일자리·민생예산으로(2010년 예산안 대토론회 자료집). 14-47.
- Barack Obama and Joe Biden's Plan for Lifetime Success through Education*(WWW.BARACKOBAMA.COM, 2008)
- OECD(2005).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5*.
- OECD(2009).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9*.

<MEMO>

<MEMO>